

경찰 수사주체 명문화, 상호협력관계로 개선해야

- 정부의 수사권 조정案 내년 3월까지 국회 제출 기대 -

이택순 경찰청장, 국정감사 답변

최근 개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몇몇 의원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향후 추진방향을 질의하는 한편 경찰이 좀 더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수사구조개혁과 관련, 『청장이 좀 더 확고한 원칙과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변의 의문이 많고, 특히 9월 26일 황운하 총경의 전보에 대해 『수사구조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나』고 질타 하자, 이 청장은 『황 총경의 인사조치는 현장에서 근무하며 피의자 인치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인치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시까지지는 기관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작년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그러한 지시를 위반하여 인 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검찰의 강제인치 조치는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경찰도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비변자를 동원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경찰이 추구하는 인권경찰이란 이념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주



경찰청 수뇌부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했다.

한편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수사권 조정은 『수사의 공정성·효율성, 국민의 편익, 국민인권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결말을 내려 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수사분야의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에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된다』고 지적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정부에서 이 문

제를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경·검의 입장을 고려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수사권 조정은 공정·과학적 수사능력 확보와, 인권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국민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전문수사관 양성은 현행 수사경과 제로는 미흡하며, 수사경찰은 시험과목도 형법·형소법 등을 위주로 달리하여

채용하고,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청장의 견해를 물었고, 이 청장은 『수사경찰에 대한 별도 채용은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도 신입경찰 90% 이상이 대졸자이고, 채용과목에 형법과 형소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 우리당 이인영 의원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 사법제도 개혁에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무엇이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은 국가의 발전,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관간 견제균형을 위해서 반드시 경찰도 수사주체로서 하고 있는 일을 문문화하고, 상명하복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개선하여 수사경찰의 사기도 높이고 국민편익 증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하루 빨리 경찰과 검찰의 의견을 고려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등 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이 의원에게 이 청장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면 대통령 선거가 있어 수사권 조정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민여론을 고려해 내년 2-3월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어 제출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시위 엄정관리 · 불법사행성 게임장 강력 단속

- 경찰청, 전국 지휘부 회의 개최 -

경찰청이 지난 11월 3일 오전 혁신회의실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갖고 그간 미진했던 치안과제 점검과 더불어 불법사행성 게임장 노래연습장 단속 등과 같은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날 이택순 경찰청장은 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과 국민은행 권총강도사건 등 한해의 치안성과에 대한 현장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사실상 휴업, 폐업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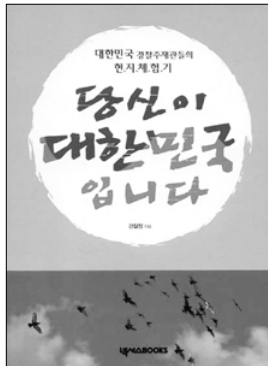
대이나 수법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불법사행성 게임장과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심지역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시위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경찰의 시위문화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을 지시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 경찰청, 해외 주재관들의 현지 체험 수필집 발간 -



경찰청이 최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찰주재관들의 현지 체험기를 담은 수필집 「당신이

국제성 범죄자 검거를 위한 수사공조, 국제 성범죄 관련 정보 수집, 해외도피사범 송환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 1967년 일본에 처음 파견된 이래 현재 25개국 42개 공관에 51명이 활동하고 있다.

『개구리 소년』 부모들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경찰 수사과정서 위법한 행위 안했다』 판결

지난 91년 대구 외통산에서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과정 중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김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개구리 소년’ 부모들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수사과정과 유골 발굴 과정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단순 가솔이나 실종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 유괴나 타살 등 범죄 관련성 여부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의 초동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유골 발굴 과정에서 현장보존의 원칙을 어기고 현장을 훼손해 범인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시기와 단서를 놓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했고 유골 발굴 과정에서도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현장을 훼손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신뢰 높였다

- 은행 권총강도 및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 해결 유공 경찰관 특진 -

이택순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강남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고 은행 권총강도사건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서래마을 영아살해사건과 관련해 한국 경찰의 과학수사역량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한 수사팀과 과곡수 분석팀에 대해 특진 등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에 특진의 영공을 안은 경찰관은 서울강남서 강력 4팀 김한근 경위와 서울방배서 강력 3팀 윤홍덕 경장으로, 이들은 각각 은행 권총강도 사건 및 서울 방배동 서래마을 영아살해·사체유기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서울강남 은행

권총강도사건은 지난 10월 18일 발생한 사격연습장 권총분실사건과의 연계성 분석과 원활한 공조수사를 통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인 모범적인 사례이며, 서래마을 영아살해사건 또한 철저한 현장확인과 탐문, 우수한 과학수사시스템이 결합되어 이루어낸 한국경찰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현지 경찰들이 우수한 수사능력을 보여 준 것에 대해 수사간부 출신들의 모임인 搜友會(회장 최종락) 회원들도 이날 강남서를 방문하고 유공 경찰관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李相하의 교통상식-(47)



이천으로 향하던 중 중부고속도로에서 짙은 안개를 만나게 됐다.

급한 마음에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리다 광주 인터체인지를 지나 나타난 고갯길에서 그만 앞차를 들이받고

리를 마친 뒤 장씨에게 다가왔다.

경찰관은 일단 장씨차가 급제동할때 생긴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재보았다.

“32m입니다. 시속 80km로 달리셨군요” 순간 장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중부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10km니까 그나마 과속은 아닌 셈이고 따라서 중대법규위반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찰관의 설명은 달랐다.

안개로 전방 시야가 안 좋을 경우 제한속도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과속이라는 것이었다.

안개지역은 제한속도 1/2적용 평상시 속도였으면 과속

말았다.

당시 고개 반대편에는 역시 짙은 안개로 10중추돌 사고가 나있던 터라 차량이 정체 돼 있었고 장씨의 앞차는 이를 보고 급제동을 한 것이었다.

3중 추돌사고였다. 차도 심하게 망가지고 앞차 운전자는 목뼈가 심하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앞서 벌어진 10중 추돌사고 때문에 이미 출동중이던 조사경찰관이 사고처

따라서 장씨는 제한속도 시속 55km를 무려 25km나 초과해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었다.

장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결국 부상을 한 승객에게 종합보험 외에 상당금액의 위로금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뒤 겨우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대선공약 반드시 지켜야

<1면에 이어>

하지만, 전국의 경우들과 10만 경찰, 깨어있는 시민들이 포기하고 주저 않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은사’로 얻는 반쪽자리 개혁이 아닌, 경찰과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진정한 수사구조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검사가 법을 어기면 경찰수사를 받고 경찰이

인권침해하면 검찰의 처벌을 받는 ‘견제와 균형’을 가질 자격이 있다.

언론과 정치권, 시민사회도 ‘검·경 간 밥그릇 싸움’이라며 상투적인 양비론에 안주하는 종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역사가 뒤늦게 놓은 검경관계를 바로잡고 권력이 아닌 열린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속으로 이들을 위위치시키는 시대적 사명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아직도 후진국 수준의 불법폭력 시위인가?

1. 이제 후진국형의 불법폭력시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테러」에 가까운 집단행동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
- 진압경찰 투입반대와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시위진압이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

2. 지구상에 警察과 軍이 매 맞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과 군인을 향해 쇠파이프와 죽봉으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 공권력은 민주국가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경찰은 바로 국가공권력의 상징이다.

3. 불법행동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해야 합니다.

- 방패만 들고 불법폭력시위대에게 공격당해 쓰러지는 초라한 경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 최루가스 장비는 폭력시위대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경찰에게 공인된 장비이며, 이제 민주화가 성숙된 상황에서 불법폭력시위대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준법평화시위를 권장하고 적극 보호해 자발적 평화시위문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 한국 노동운동은 폭력의 관성을 깨고 대화와 타협의 선진노사문화 정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5. 경제를 되살려 번영된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줍니다.

- 불법폭력시위를 근절시켜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고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자.
- 「평화적인 시위문화정착」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06년 11월 10일

大韓民國在郷警友會